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태화강국가정원(1 급수 생태하천 태화강을 끼고 있는 친환경 생태 정원)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6월 10일(제118호)

발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소 03186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02-2170-6092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Vol. 118

2024. 06.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2024년 역점과제

- ▶ 울산시, 투자유치 20조 원 돌파
- ▶ 전국 최초, OK 생활민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울산 전역 확대
- ▶ 전국 최초 24시간 시립 돌봄서비스 지원(울산 시립돌봄센터 설립)
- ▶ 민·관 인사 교류 민관 협력 새로운 길 개척
- ▶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트램 대중 교통서비스 사업 추진

울산의 주요정보

- ▶ 울산의 관광지
- ▶ 울산의 축제

울산광역시 우수사례

- ▶ 울산 중구, 황방산 황톳길 맨발등산로 조성
- ▶ 울산 남구, 폐산업시설 재생으로 탄생한 장생포문화창고
- ▶ 울산 동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울산 북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 울산 울주군,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의회소식

- ▶ '전국 최초' 원전재난 대비 시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
- ▶ 울산시민에게 열려있는 울산시의회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주)팀솔루션 김지인 대표편

정책포커스

- ▶ 축소사회, 국민이 바라보는 지역 인구감소와 대응 정책
- ▶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 방안 모색





시도지사 칼럼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시도지사 칼럼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방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현상과 함께 지방은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특화된 문화를 통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권한이 축소된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며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인구 감소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한국 사회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민선 8기 울산은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라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친기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산업수도 위상을 되찾아 울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울산시민이 울산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밀접한 생활권인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동맹과 울산·부산·경남의 초광역경제 동맹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친기업 정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기업이 찾아오는 친기업 도시 울산

민선 8기 취임 후 ‘울산 영업사원 1호’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친기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다.

현대차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여 공장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기업현장지원단을 신설하여 고려아연·삼성SDI 현장을 지원하고 샤인프로젝트 소방인허가 지원 전담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30만㎡ 미만→100만㎡ 미만 달성) 정부 건의,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GB해제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 공론화 등의 노력으로 총 20조 원의 대규모 기업투자과 도심융합특구 개발제한구역 제1호 해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 용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물류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친기업 정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시대 실현,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

지방시대는 단순히 중앙의 행정권한이나 재정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각종 중앙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제 울산은 지방시대를 맞아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게 된다.

2024년 역점과제

울산시, 투자유치 20조 원 돌파

전국 최초, OK 생활민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울산 전역 확대
전국 최초 24시간 시립 돌봄서비스 지원(울산 시립돌봄센터 설립)
민·관 인사 교류 민관 협력 새로운 길 개척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트램 대중 교통서비스 사업 추진



울산시, 투자유치 20조 원 돌파

민선 8기 출범 1년 10개월 만에 투자유치 실적 20조 원 돌파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울산'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투자기업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규모도 762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이런 투자유치 성과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울산 만들기'를 시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투자 환경 개선에 매진한 결과이다.

우선 인허가 부서 직원들로 현장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인허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삼성SDI 배터리와 양극재 생산공장 인허가를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 18만90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울산은 앞으로 남구 울산체육공원,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중구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울현지구 등도 해제를 추진해 산업 용지를 적기에 조성·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이 가능한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수도권 기업 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OK 생활민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울산 전역 확대

울산은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을 올해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가정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전기제품 수리 등 생활 불편 민원을 주거지 인근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전국에서 울산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서비스다.
올해 현장 서비스의 날을 4월부터 11월까지 5개 구·군의 읍·면·동별로 순회 운영한다.
현장 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소형 가전 수리, 자전거 수리, 화분 분갈이, 칼갈이 등이다. 각종 생활 상담과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구·군별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특색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구 울산종합운동장, 북구청 광장, 남구 달동 문화공원에서 1회씩 총 3회 현장 서비스의 날을 시범 운영했다.



전국 최초 24시간 시립 돌봄서비스 지원 (울산 시립돌봄센터 설립)

울산형 책임 돌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울산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최초로 365일 24시간 0~12세 영유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시립 돌봄 센터를 설립한다.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는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설립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립 아이돌봄센터는 0~12세,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통합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0~6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7~12세 아동은 지역 돌봄 시설이나 늘봄학교에서 교육과 돌봄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반면 시립 아이돌봄센터는 두 기능을 통합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주간에는 놀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 보육사 등 정규 인력 10여명과 아이돌보미 파견 인력 등 운영 인력은 30여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민·관 인사 교류 민관 협력 새로운 길 개척

강소형 지방정부 만들기 앞장, 기업지원·규제개선 넘어 첫 시도

울산은 친기업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민선 8기 울산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과 인력 운영을 통한 강소형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직렬 타파 인사와 기업현장지원팀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정부와 기업 간 인사 교류도 그 일환이다. 앞서, 파격적인 기업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취임 16개월 만에 15조 9000억원의 투자유치, 6400여 개 일자리 만든 것처럼, 민관 협력의 범위를 인적교류까지 확대해서



현대중공업 전무 김규덕 HD



울산시 기업현장지원단장 송연주

지방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울산시 서기관을 HD현대중공업에 파견하는 것이 첫 시도다. 이를 통해, 기업 특유의 도전정신과 경영방식을 지방정부에 이식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인사 교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트램 대중 교통서비스 사업 추진

친환경 수소트램 도심 누비는 울산의 ‘즐거움 상상’

울산은 국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도시철도)이 없다. 이에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1997년 7월 광역시 승격 후 26년 만에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수소를 동력원으로 쓰는 ‘트램(노면전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울산에 운행된다. 수소트램은 2029년 완공될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에 도입한다.

울산은 3297억원 들여 태화강역(울산 도심)~신북로터리(울산IC 인근) 총연장 10.99km 구간에 수소트램(15개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수소트램은 울산 도심에서 하루에 2만4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소트램 사업을 통해 시내버스뿐만 대중교통 한계를 극복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도시경관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울산의 주요정보

울산의 관광지
울산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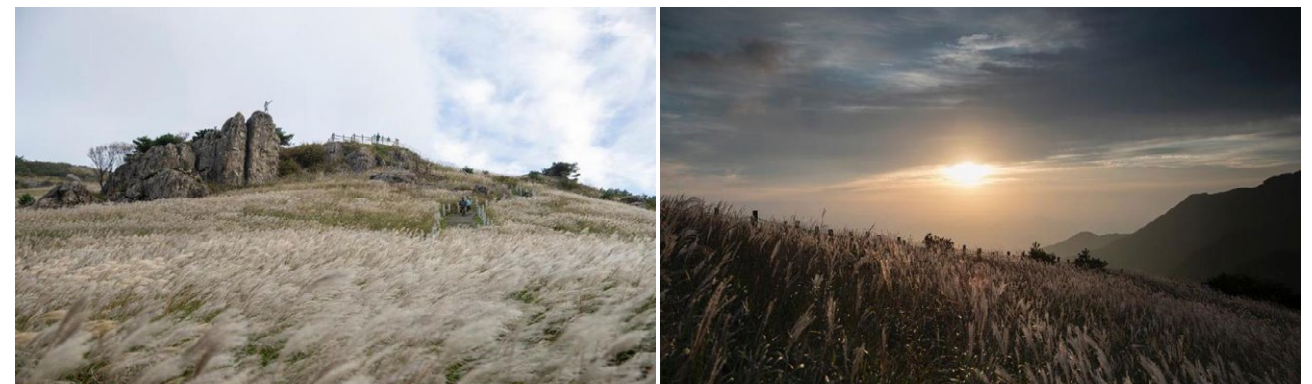
울산의 관광지

산 · 바다 · 강이 있는 관광도시 지향

울산은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해 울산이 가진 자연생태환경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울산을 다녀간 분들은 한결같이 자연환경에 매료됐다고 밝힐 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

산

영남알프스 간월재



울산은 바다와 함께 산의 도시이다. 1,000미터가 넘는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등 낙동정맥의 준봉들이 영남알프스라 불리며 전국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간월재는 신불산과 더불어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쪽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을 이루고 서쪽은 경사가 완만한 고원지대를 이룬다. 정상에서 간월산장까지 뺀은 험준한 바위능선 간월공룡(間月恐龍)이 등산객에게 인기가 높고, 억새꽃이 만발하는 가을이면 간월재에서 산상 음악회가 열려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이다.

달천 천마산편백숲

달천 천마산편백숲이 한국관광공사 '2020 언택트 관광지 100선' 및 '2021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선정되었다. 달천동 천마산에 산림욕장을 겸한 주민휴식처로 5ha에 30년 이상 된 편백나무 8,500여 그루가 조성되어 있으며, 만석골 저수지에서 편백숲까지 산책로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비치베드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작은 숲속 도서관과 숲 해설사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심신회복과 자연학습을 제공한다.



바다

일산동 대왕암공원

산책이 즐거운 숲 그늘과 기암괴석 해변을 끼고 있는 동구 일산동의 공원은 도심 속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귀한 휴식처다.

942천㎡에 달하는 산뜻한 공간을 가진 이 공원 옆에는 울퉁불퉁한 바위해변을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일산해수욕장의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 더욱 좋다.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가장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 지점에 해당하는 대왕암공원은, 그래서 동해의 길잡이를 하는 울기등대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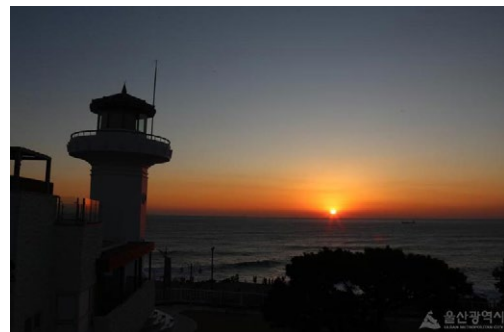


간절곶-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동해안에서 새해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간절곶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이다.

이곳에서는 영일만의 호미곶보다 1분, 정동진보다 5분 일찍 해가 뜬다.

간절곶 등대 인근에는 유채꽃이 만발하여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세계 최대 크기의 소망우체통이 있어 엽서를 넣으면 실제로 전국 배달이 된다. 소망우체통에 넣는 엽서는 인근 간절곶해울제(울주군 특산물판매장)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강

태화강국가정원-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은 봄이면 6천만 송이의 꽃과 정원문화, 십리대숲 등 울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 정원인 십리대숲이 약 4km 구간에 걸쳐 있고, 일본·중국·우리나라의 대나무 63종을 볼 수 있는 대나무생태원,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초화단지, 개인·작가·학생·시민단체의 참여로 정원과 예술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각종 주제정원 등이 구성되어 있다.



울산의 축제

울산공업축제



울산공업축제는 '울산을 울산답게, 꿈의 도시 울산'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자, 지역 기업과 근로자,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울산의 산업·문화 발전을 위해 35년 만에 부활했다.

'새로운 시작, 위대한 첫걸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23 울산공업축제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를 중심으로 울산 전역에서 되었다.

나흘간의 대여정은 공업탑 출정식을 시작으로 기업과 근로자, 시민과 구·군이 함께한 울산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준 거리 퍼레이드와 울산 사람 대화합 플래시몹(Again 1967)으로 막을 올렸다.

퍼레이드를 서막으로 시작한 '2023 울산공업축제'는 개막식으로 화룡점정을 이루었다. 개막선언과 화려한 불꽃 쇼, 축하공연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놀거리와 끊임없는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였다.

비보이 페스티벌, 록 페스티벌, 가족음악회, 청소년가요제, 국제매직컨벤션 등 32개 공연 프로그램과 256개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미래박물관, 울산산업골든벨, 시민생활체육대전, 울산광역시장배 아마골프대회 등 산업과 체육행사 등을 연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내 울산의 정체성을 가진 대표 종합 축제로 거듭났다. 2024 울산공업축제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울산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산업도시 울산의 특색을 살리고 즐기는 축제, 기업, 근로자, 시민 등 '울산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울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축제로 진행하게 돼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고래축제



울산은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이 바위에 고래를 새겨 놓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근대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장생포의 역사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고래도시다. 이러한 고래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래의 본고장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울산고래축제'가 시작되었고 올해 28회째를 맞이한다.

울산고래축제는 국내 고래테마공원 1호인 장생포고래문화마을과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 일원에서 고래를 테마로 하는 고래퍼레이드, 수상 퍼포먼스, 뮤지컬 및 다양한 공연, 장생포 밤바다 장생포차,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고래문화특구에는 울산남구 9경에 선정된 노을이 아름다운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 고래를 직접 찾아 나서는 고래바다여행선, 국내 유일의 실물 고래골격과 고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장생포 모노레일 등 고래문화특구 전체 시설에 일관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입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전국 유일무이한 고래인프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 기간 : 2024.9.26. ~ 2024.9.29. /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울산조선해양축제

2024 울산조선해양축제는 2024년 7월 19일(금)~21일(토) 3일간 해양관광도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행사이다. 19일 금요일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발한 배 콘테스트, 나이트런 일산과 같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킬러 콘텐츠가 펼쳐진다. 또한 동구관광투어와 해양레포츠체험 같은 다채로운 체험·참여·전시·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일산 EDM 페스티벌, 야심한 밤에 버스킹 등 여러 장르의 무대 프로그램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산 썸머빌리지와 같은 해변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 기간 : 2024.7.19. ~ 2024.7.21. /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산 마두희 축제

마두희축제는 단오때 울산사람이 동과 서로 나눠 큰 줄을 당겨 승패를 가리고 풍년을 기약하는 전통놀이로 약 32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울산마두희 큰 줄 당기기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태화강 수상 프로그램까지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태화강마두희축제에는 특별함이 있다.

※ 기간 : 2024.6.14. ~ 2024.6.16. / 중구 성남동 시계탑사거리



울산 쇠부리 축제

쇠부리축제는 한반도 이천년의 철의 역사가 녹아 있는 축제로 울산의 산업역사와 전통제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매년 5월 개최되는 가장 울산다운 축제이다. 원삼한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철을 생산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이며, 오늘날 세계적인 산업도시 울산을 잉태시킨 이천년 철의 역사가 숨쉬는 곳, 달천철장이다.

※ 기간 : 2024.5.10. ~ 2024.5.12. / 북구 달천철장, 북구청 광장



울산 옹기축제

울산옹기축제는 한민족과 천 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한 '옹기'를 주제로 특화시킨 국내 유일의 축제이다. 옹기축제는 2000년 11월 외고산에 거주하던 옹기 장인을 주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행사에서 시작한 울산옹기축제는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8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 기간 : 2024.5.4. ~ 2024.5.6. /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대



울산광역시 우수사례

울산 중구, 황방산 황톳길 맨발등산로 조성
 울산 남구, 폐산업시설 재생으로 탄생한 장생포문화창고
 울산 동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울산 북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울산 울주군,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울산 중구, 황방산 황톳길 맨발등산로 조성

황방산 황톳길은 중구 장현동 일원에 있는 등산로로 황방산 생태야영장~안시례방향 1km, 황방산 생태야영장~장현방향 1.5km 총 2.5km 구간으로 되어 있다. 중구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황톳길 노면을 정비하고 세족장, 신발장,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이러한 울산 중구의 노력 덕분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황방산 황톳길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3~4천 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황방산이 큰 인기를 얻자 다른 지역에서도 본따르기(벤치마킹)를 위한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지역주민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정 으뜸시책5 선정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황방산 황톳길 맨발등산로 조성'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울산 남구, 폐산업시설 재생으로 탄생한 장생포문화창고

남구는 방치된 폐산업시설(냉동창고)을 리모델링하여 장생포 바다의 속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를 개관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문화의 보물창고'라는 의미의 장생포문화창고는 미디어아트 전시관, 갤러리, 소극장, 음악연습실,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 장생포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카페 '지관서가', 푸드코트 등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바다와 지역사, 예술, 인문 등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총마다 챕터를 넘기듯 펼쳐지는 장생포문화창고는 지난 해 누적방문객 30만명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5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문화명소 분야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 동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최근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기의 회복으로 많은 외국인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유입되면서 울산 인구 증가세 기여에 한몫하고 있다.

지역 내 문화 갈등과 치안 문제, 지역주민과의 상생 등 지역사회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존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 '외국인노동자도 함께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해 지난해 7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경찰,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이 모여 '울산 동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각종 사회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여, 이들이 지역경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울산 북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00여 년간 북구를 동서로 단절시키고 주민들을 소음, 통행불편,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불편하고 단절된 공간'인 폐선부지를 기후대응 숲으로 조성했다.

울산시계부터 명촌교까지 도심에 조성된 '울산숲'은 15.6km, 90.4ha 면적의 선형 숲은 기후위기 시대에 건강한 도시를 만들 울산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숲' 조성에 민간 단체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도시 숲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22년 10월 민간봉사단체 <초록숲길>이 발족해 도시숲 가꾸기에 힘을 보탰다.

도심을 관통하는 울산 북구의 울산숲은 주민의 삶에 쾌적함과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울산 울주군,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울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드론배송 시대의 개막으로 마트와 연계한 관광지로 배송하는 관광 활성화사업이라는 점과 어촌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2023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였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차·2차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배우고자하는 전국 공공기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소식

‘전국 최초’ 원전재난 대비 시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
울산시민에게 열려있는 울산시의회

‘전국 최초’ 원전재난 대비 시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

울산시의회,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원전 내 시설 정지 및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 도래 등에 따라 원전 및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특히 울산은 고리원전과 신고리원전, 월성원전 등이 인접한 전국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어느 곳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안전교육의 필요성 또한 절감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감안하여,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하였다.

현재 경북, 부산, 대전 등에서 원자력시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조례를 운용 중이지만, 비상시 시민이 스스로 대피하고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게 평상시 안전교육과 대피 훈련까지 한다는 취지의 조례는 울산이 처음이다.

울산시의회는 전국 첫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원전 안전교육 사업이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 조례가 원전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민에게 열려있는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방문 의정 체험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견학 등 의정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는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 60여 명이 울산시의회를 견학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기환 의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동구 지역구 의원들과의 토론, 홍보 영상 시청, 일일 의장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울산시의회는 의정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정 경험을 통해 울산 시정과 의정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주)팀솔루션 김지인 대표
허브(지방시대 서포터즈 19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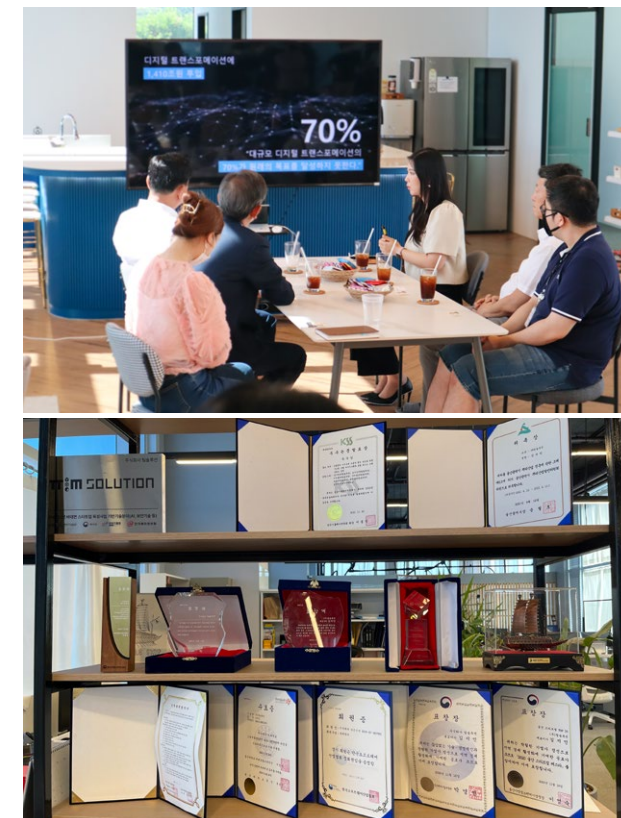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실현하는 산업현장의 지능화

팀솔루션은 산업 전반에 적용가능한 범용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소, 자동차 제조 현장 등의 산업현장의 관리시스템에 3D를 결합한 'Digital Twin(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3D 입체 모델링 데이터를 경량화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정보를 연동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연구·개발하며, 현장 데이터 취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인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기존에 무거운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설계) 데이터를 특허받은 경량화·최적화 기술을 통해 가벼운 일반 PC 및 스마트폰에서도 빠른 확인이 가능하게 구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뛰어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해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수상하고 기업만의 특허를 등록,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2019년에는 세계 지식 포럼대회 스타트업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산업현장의 제조, 운영, 관리영역(MOM)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게임엔진을 활용한 고품질의 3D 시각화, 기존 Legacy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결을 통해 사용자 요구에 맞는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을 솔루션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자원과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회사들에 디지털 혁신을 제공하는 IT 기업이 되었다.

다양한 플랫폼을 연결하는 플랫폼 위의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는 팀솔루션의 김지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산업현장을 한눈에 파악하게 만들다

해외의 경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핵심기술로 떠오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디지털 트윈은 생소한 분야이다.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단순히 3D 모델을 만드는 것, AI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하는 것,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VR, AR 등을 활용한 활동을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디지털 트윈의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산업, 의료, 도시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하다. 팀솔루션이 추구하는 디지털 트윈이란 제조산업현장을 3D로 구현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사업을 시작하던 2017년에도 이미 기업들은 다양한 IT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IT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각각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CTO(Chief Technology Officer)가 게임엔진을 이용해서 3D로 해결하고 있었다. 당시 산업에서는 그러한 실감 높은 3D 솔루션이 없었던 게 기회가 되었고, 고객과 가까이 있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왜 울산광역시인가?

김지인 대표는 스스로를 ‘고객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그녀가 울산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고객’이다. 팀솔루션의 솔루션은 산업현장을 3D로 옮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이 크고 복잡할수록 그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의 니즈도 더욱 커진다. 따라서 고객을 가까이하여 구체적인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현장에 기술을 실증하기 수월한 산업도시 울산이 최적의 거점이었다. 실제로 창업 이후, 팀솔루션의 중요한 고객들은 울산과 지방에 제조 현장을 둔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의사결정자들을 만나고, 대외활동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22년에 서울 사무실을 개소해서 서울지사에서 영업 및 PM 활동을 하고 있다.



제조 산업현장의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까지

비전공자였던 김지인 대표가 조선업 공정관리와 같은 제조 산업현장의 전문가가 되기에는 배우자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녀의 배우자는 현대중공업에서 약 17년간의 공정관리 경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당시 무거운 3D CAD의 경량화를 바라는 대기업의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김지인 대표는 배우자를 내조하고자 포토폴리오를 제작하여 돌렸다. 그러한 과정 중 자연스럽게 시장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장 데이터 취합의 불편함과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중공업과 관련성이 없고 IT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배우자라는 연결고리를 받침 삼아 ‘디지털 트윈’이라는 IT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더불어 김지인 대표가 지닌 가치관 중 하나인 1만 시간의 법칙도 그녀가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익혀온 비즈니스 감각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다



팀솔루션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2023말 기준, 30여 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이를 반영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팀플로우를 출시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장에 실제 기술을 적용하며 고도화시키고 지속해서 제품 및 사업 확장, 문제점 보완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 또한 있기 마련이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생소했던 만큼 대부분의 고객이 스타트업보다 글로벌 기업을 선호한다는 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말 그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입 비용이 높고 도입까지 오래 걸리는 편이었다. 또한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섬세하게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프로젝트 결과에 실망하고 팀솔루션에 의뢰하는 고객들도 볼 수 있었다. 팀솔루션은 자신들이 스타트업이며 규모가 작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해, 이를 고객에게 강점으로써 제안했다. 생소한 기술이니 작은 규모로 선 제안을 하고, 효과를 실증한 후 확장하지는 방식을 채택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디지털 트윈 노하우를 축적하여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을 꿈꾸며

이전에 해외 고객사와의 협업을 필두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사실 2019년부터 해외 진출을 준비했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해외 진출이 조금 지연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코로나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 진출을 고려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고객을 만나는 것이었다. 해외의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런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를 출품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국내 기관에서 지원하는 고객 네트워킹 활동도 시도하게 되었다. 확실히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니, 현지의 반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일본지역에 대리점 계약과, 요코가와 일렉트릭과 글로벌 리셀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팀솔루션’만의 특별함

팀솔루션이 지닌 강점은 ‘고객이 직접’, ‘쉽게’,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많은 고객이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데, 디지털 트윈도 그 과정 중 하나이다. 사실 고객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기술 도입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IT 솔루션은 대부분 자체 관리가 어려워서 외주로 운영되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비용이 높아져서 사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솔루션은 도입 이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 코딩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다. 고객이 전문적인 3D나 IT 지식이 없어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고객의 IT 자산을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시범 삼아'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시기가 지난 현재, 장기적 관점의 운영 효율을 고려했을 때 팀솔루션의 강점이 더욱 빛나는 것 같다.

또한 창업 멤버들이 IT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었다는 것도 강점이자 특징이다. 현장의 문제를 잘 아는 이들이 IT에 대해 학습한 후 창업을 한 것이다. 이 덕분에 사업초기에 실제 산업 현장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 호평받은 경우가 많았다. 3D는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사람에게 높은 이해도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3D를 활용해 부품 교체 등의 순서를 시각화함으로써, 현장의 복잡성을 낮출 수 있었다. 현업에 있을 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D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현장에서의 3D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가 3D CAD의 무게였다. 3D CAD가 무겁다는 것은 메타 데이터가 많고 공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인해 웬만한 PC에서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고려하여 가벼운 일반 PC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및 3D를 가볍게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내었고, 자체 제품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현장에 있던 15년 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조선해양 캐드를 시작으로 하여, 이를 인정받아 다른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작년 8월, 트랜스레이터(캐드 경량화 S/W)를 범용으로 출시했으며,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는 중이다.

‘글로벌 NO.1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이 되기 위한 발걸음

이전에 고객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연결하는 플랫폼 위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NO.1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혔다. 이렇게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 단계들이 생겨났다. 최근 팀솔루션은 첫 해외수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주요 고객사와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팀솔루션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올 한해, 이 두 건의 계약을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객 실증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집중 개선하고 고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해외 박람회 출품도 앞두고 있어, 더욱 다양한 고객을 만나길 소망하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건네는 조언

창업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창업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창업의 본질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아이템)이 고객에게 얼마나 잘 팔릴 것인지, 사업화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이 경력을 쌓거나 지원 사업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등 다목적이 되며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 창업은 희박한 확률로 성공하고 살아남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외부의 요소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창업의 본질을 머릿속에 늘 새기며 활동을 진행한다면 내실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년 시기에는 실패를 겪어도 중년 시기에 비해 금방 일어설 수 있고, 청년 시기에 큰 꿈을 꿀수록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양질의 기업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똑똑한 요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앞으로 청년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길 응원하고 있다.

〈지방시대 매거진〉독자들에게

팀솔루션을 창업하고 투자 설명회를 다닐 때, 왜 울산에서 창업을 하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다. 투자 유치가 실패될 때마다 우리가 지방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서울로 옮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울산이 정말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 산업군 생태계가 굳건한 지역인 탓에 IT 인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탑 티어 고객이 가까이 있는 만큼, 오히려 고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나머지 기업 성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 멤버들이기에, 누구보다도 고객의 현장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현장의 큰 저항감 없이 적용할 수 있었다. 그것이 팀솔루션이 고객에게 인정받는 큰 부분이다. 결국 고객이 있어야 기술이 있는 것이고, 좋은 고객이 좋은 기술을 이끌어 내고 좋은 인재도 모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외국 제품으로, 국내 스타트업이 산업에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산업의 한쪽을 차지하여 널리 쓰여지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팀솔루션 또한 이를 꿈꾸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대기업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함께 한국 산업용 소프트웨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기를 바란다.



정책포커스

축소사회, 국민이 바라보는 지역 인구감소와 대응 정책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 방안 모색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축소사회, 국민이 바라보는 지역 인구감소와 대응 정책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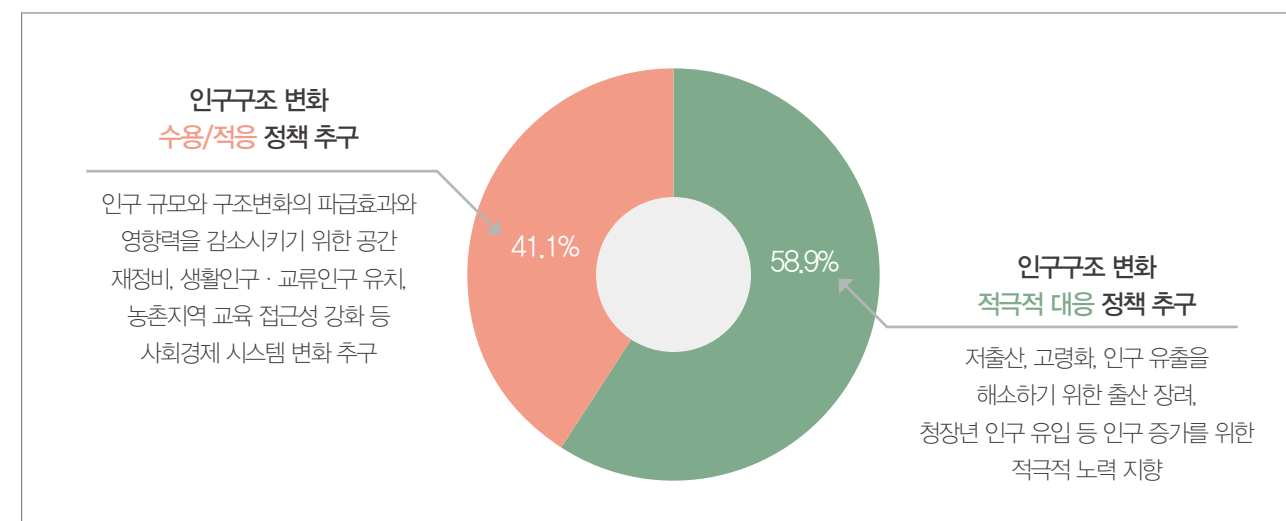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인구 관련 통계는 2020년을 기점으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2020년 이후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지방소멸'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인구감소 현상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벽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인구절벽, 특히 지역의 인구감소라는 난제를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목표, 전략, 수단의 전면 개정하는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에 봉착해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지역 인구감소 현상¹⁾

암울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함께,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지역 별 인구감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네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먼저,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있어 여전히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대응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춰 변화시키는 '적응형' 정책 선호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효과성과 향후 정책 목표 및 전략의 재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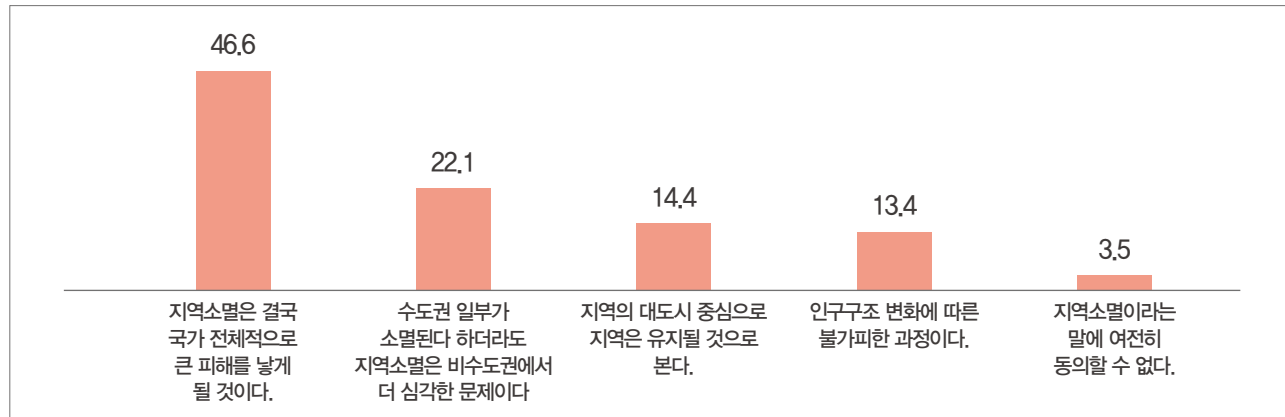


출처 : 2023 정책연구 국민수요 조사

1 세부 통계자료는 경인사의 '2023 정책연구 국민수요조사' 참고

국민들은 지역 별 인구감소는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모두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 이는 곧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국민의 경우 지역의 인구감소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응답이 수도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인구감소를 해결의 문제가 아닌 '적응과 완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림2〉지방소멸 의견 공감도



출처 : 2023 정책연구 국민수요 조사

세 번째로, 수도권과 대도시권 거주 국민들이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와 '소비' 인프라 구축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바라보는 삶의 질 개념이 단순히 일자리와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향상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의료, 소비의 즐거움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으나 비수도권과 중소도시가 이러한 국민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3〉주민 삶의 질 격차 요인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광역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화 방식에 있어서도 '통합'의 방식 보다는 '연합' 혹은 '협력'의 방식으로 그 대상은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 혹은 소멸지역 중심의 '중소규모'의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방안들이 정치적 논리로 광역단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와는 상반되는 의견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한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운영 방안



출처 : 2023 정책연구 국민수요 조사

축소사회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

앞선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정책의 기초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가장 먼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목표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산업의 고도화, 경제 규모, 인구규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축소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또한 이에 조응하는 '적극형' 정책에서 '적응형'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수립 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과 경제사회적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 정책의 목표, 전략, 수단을 재정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

첫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차등적 정책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인구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간 형평성 관점에서 시행되어 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이 기반한 정책 전략의 수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에 맞춘 지역기반 산업 유치 및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소기반 전략과 지역혁신 역량제고와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적응하는 수월성기반 전략이 혼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의 인구관련 대응 정책은 인구증가(출산장려)와 지역인구감소(인구유출입)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로 출산과 기초복지를 전 국가의 보편 복지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인구 유출입 및 생활인구 활성화 등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지역 맞춤형 정책의 이니셔티브 확보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을 지역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며 생활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거주(외국인 포함), 교류, 체류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을 '관계인구'로 확장하여 지역과 다양한 관계 형성하고 있는 외부인구가 최종적으로 정주로 이어 질 수 있는 포괄적인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광역화를 위한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분절화된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행정수요 기반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의 사전적 단계로 기초자치단체 기반으로 지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서비스 창출 및 제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역 정부 단위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를 시작하여 의사결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맺는말

우리국민들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현행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 즉, 삶의 질 향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구감소 지역 대응 방안에 대한 성찰과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박사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 방안 모색

1.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이하, 투자심사제도)는 1992년 도입된 후 1994년 법제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30년 이상 운영 중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필수 시스템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최전선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공공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투자심사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던 투자심사제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일부 위임하여 운영토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개정 이전에도 심사규칙 등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관행적으로 강제 운영하고 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지적¹⁾이 있었기에 제도가 원래 법률 취지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자치단체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표-1〉「지방재정법」 개정 내용

구분	2021.01. 기준	2023.04. 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2023.09. 기준	2024.01.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1 개정전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심사의 권한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심사규칙 등에서 위임 밖의 사항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하도록 강제하여 위법의 소지. 개정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율에 따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 후에는 강제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중앙 의뢰 심사를 수행하도록 강제.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최근의 투자심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과거 급속한 성장을 위해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인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점차 회귀하고 있다.

투자심사제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제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이후 중앙정부는 투자심사 이전 수행해야 하는 500억 원 이상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수행 전문기관을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단독 기관이 독점하여 수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이 독과점 문제점을 지적하자 행정안전부 산하의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에 공유재산을 포함하거나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건설과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나 국비가 전혀 없는 투자사업까지도 중앙정부가 투자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은 최근의 정부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2023년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5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지방 킬러 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와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등의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이 추진전략에는 과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심사제도는 이러한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중심의 보수적 제도 변화는 일차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에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역할 확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투자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심사하는 제도 운영 방식은 지방정부의 사업관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차단하고 각종 심의와 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중복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며, 투자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하여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

투자심사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규모와 지출 자율성에 큰 차이가 있어 일부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율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투자심사제도 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의 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국비 지원 비중이 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책임성이 보다 가벼운 중앙정부 중심의 현재 심사제도를 보다 선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사업의 추진과 심사의 책임을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향에 맞춰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2〉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

구분	현행	개선방향
자율성 측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획일적인 형태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가 수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사업이 결정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추진과 심사의 책임을 모두 자치단체가 부담
책임성 측면	- 중앙정부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수행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재. 오히려 투자를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책임 회피 빌미를 제공 - 심사는 중앙정부 주도하고 사업실패의 책임은 자치단체가 부담	

첫째,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 주체의 일치

의존적 방식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단순히 사업 규모에 따른 심사 주체 결정이 방식이 아닌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투자심사제도는 심사는 중앙정부가 하지만 사업 추진의 책임은 자치단체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계획 및 심사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심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심사 결과에 책임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3〉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재정투입 주체와 심사 주체의 일치)

구분	현행	개선(안)
투자심사 주체	- 재원부담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분야와 사업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 결정 - 기초자치단체심사, 광역자치단체심사, 중앙투자심사 중 규모에 따라 1회	재원 구성 비율에 따라 심사 주체를 결정. 단, 일정 비율 이상 국비가 포함된 사업 등의 경우 자치단체 투자심사 이후 의뢰심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등의 단계별 심사제도 운영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	-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은 자치단체 스스로 투자심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 - 단, 국비 지원 규모가 5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고, 50% 이상이 자체재원인 매칭 사업 등의 경우 단계별 심사 추진
	- 중앙, 광역, 기초 단체 심사 중 1곳에서 심사를 추진 - 자체재원이 전액 또는 50% 이상이라도 사업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광역 또는 중앙정부 의뢰심사	
중앙정부 역할	개별 사업에 대한 직접 심사	자치단체별 투자심사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와 심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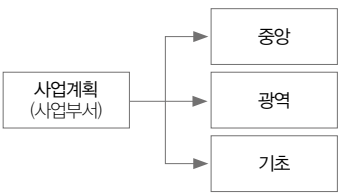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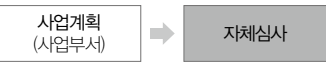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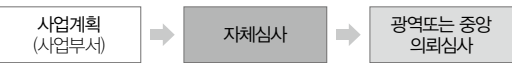
현재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받고있는 투자사업 중 상당수가 국비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사업²⁾으로, 오히려 대부분의 투자비를 부담하는 자치단체는 아무런 심사 없이 중앙정부의 심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2 서울시의 경우 중앙의뢰심사 사업('21년~'23년) 총 112건 중 96%가 국비 50% 미만 사업이고, 국비 미포함 사업도 44건으로 전체의 39% 수준

구분	0%	30% 미만	50% 미만	50~100%
2021~2023	44건(39%)	95건(85%)	107건(96%)	5건(4%)

중앙의뢰 심사 대상 사업을 축소하는 개선과 동시에 중앙의뢰 심사 대상 사업이더라도 자체심사를 선행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원 대부분이 자체재원인 투자사업의 심사를 중앙 의뢰심사로 대신하는 것은 재정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심사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일정 지연 등에 대한 부작용 보다 책임성 강화와 사업 내실화 등에 따른 실익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포기하는 것으로, 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심사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일정 지연 등에 대한 부작용 보다 책임성 강화와 사업 내실화 등에 따른 실익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4〉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운영 절차 개선(안)

현행	개선(안)
사업 규모 및 유형에 따른 심사기관 운영	재원 구성에 따른 심사기관 운영
	-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둘째,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심사제도 효율화

「지방재정법」 등 지방투자심사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투자사업의 계획과 집행은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의 투자심사제도는 다기화된 심사 주체와 복잡한 심사 과정 그리고 타 법령과의 이중 규제 등의 문제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투자심사제도로 인하여 적기 추진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별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중복 수행이다. 자치단체들은 적기 준공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중복 수행을 회피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 쪼개기, 사업 규모 축소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업이 부실하게 되거나 오히려 사업이 연장되는 원인이 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0억 원 미만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추진 절차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가 중복되어 타당성조사와 심사를 중복하여 수행해야하는 등의 중복 규제가 나타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법령에 심의 절차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자치단체 산하의 전문기관과 심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중복 규제 외에도 불필요하게 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늘리는 공유재산가격의 총사업비 포함 문제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모호한 구분 기준 등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 공공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4년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00곤돌라 민간투자사업은 심사절차와 타당성조사의 중복규제 문제점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과정과 결과가 유사한 두 번의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과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이 각각 수행하기 위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예산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자치단체 자체 민간투자 심의 절차와 중앙의뢰심사 절차 등 사업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만도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투자 시점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게되는 문제점이 발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방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5〉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심사제도 효율화)

구분	현행	개선방향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재원 구성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	• 재원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타당성조사 중복 수행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와 평가항목이나 방법 등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행	• 「지방재정법」 및 타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수행 범위나 방법 등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차례 수행만으로 각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민간투자사업 심사 절차	• 2013년 법 개정으로 동일 사업에 민간투자심의와 투자심사를 각각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에서 적격성조사를 수행하여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수행	•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
공유재산 가격의 총사업비 포함	• 공유재산을 이용한 투자사업은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단, 이용 목적이 동일한 경우 총사업비에서 제외 가능	• 「국가재정법」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공유재산 가격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 등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닌 공유재산의 가격만 총사업비에 포함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구분	• 국비 외에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 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모든 재원을 이전재원으로 판단	•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 최종 부담 주체가 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구분하고 이전재원은 국비 지원액으로 한정

3. 지방 재정 투자사업의 책임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잠재성장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투자사업을 의심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직접 통제하려는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투자심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갖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2019.6)”에서 서울시의 투자심사제도 개선 요구에 대하여 장관은 “현재의 제도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의 개선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의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위주의 투자심사제도 개정으로 서울시 자체 심사가 간소화 되면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이상의 서울시비 투자 여부를 재원부담 주체인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심사하였다. 그리고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수행하였다. 향후 해당 사업들의 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6월호는 '울산광역시' 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김두겸 시장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울산시, 투자유치 20조 원 돌파', 「전국 최초, OK 생활민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울산 전역 확대」, 「전국 최초 24시간 시립 돌봄서비스 지원(울산 시립돌봄센터 설립)」, 「민·관 인사 교류 민관 협력 새로운 길 개척」,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트램 대중 교통서비스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울산광역시 시·군·구 우수사례』에서는 황방산 황톳길 맨발 등산로 조성(울산 중구), 폐산업 시설 재생으로 탄생한 장생포 문화창고(울산 남구),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울산 동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울산 숲 조성(울산 북구),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울산 울주군)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전국 최초' 원전재난 대비 시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조례 제정), 울산시민에게 열려있는 울산시의회를 소개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울산에 있는 3D 입체 모델링 데이터를 경량화하여 산업 현장의 각종 정보를 연동하고 시각화 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팀솔루션 김지인 대표를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 방안 모색과 축소사회, 국민이 바라보는 지역 인구감소와 대응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7월호는 '세종특별자치시'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지방외교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지방자치분권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지역균형발전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